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직위해제(직무정지)에 관한 인사규정 정비 촉구

1.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발표(2018.1.29)이후 임·직원의 징계 등 인사규정을 조속히 정비토록 안내한 바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자체규정 정비 안내 현황 >

- 공문 :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393(1.29), 공기업지원과-938(3.16)
- 회의 : 시도 공기업 팀장회의(1.31),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3.20), 시도 감사·공기업팀장 회의(3.23)

2.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 징계 및 직위해제(직무정지)**미정비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니,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정비 기관 경영평가 페널티 부여 계획(안) >

- 채용비리 적발기관 : 4월부터 월별로 누적감점(3월까지 정비 감점없음)
- 채용비리 미적발기관 : 5월부터 월별로 누적감점(4월까지 정비 감점없음)

3. 아울러, 4월말 기준 자체 인사규정 등 정비현황 및 미정비 기관에 대한 사유를 2018.5.3.(목)까지 불임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자체 인사규정 등 정비현황 및 미정비 사유 1부(시도별 별송).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공기업담당관), 부산광역시(예산담당관), 대구광역시(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인천광역시(재정관리담당관), 광주광역시(예산정책관), 대전광역시(창조혁신담당관),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과장),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혁신담당관, 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 성과관리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재정점검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공기업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지원과-1480 (2018.04.18.) 접수 공기업담당관-4806 (2018.4.18.)

우 03171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5 / <http://www.mois.go.kr>

전화 02-2100-3584 /전송 02-2100-4056 / kming1218@korea.kr / 비공개(5)